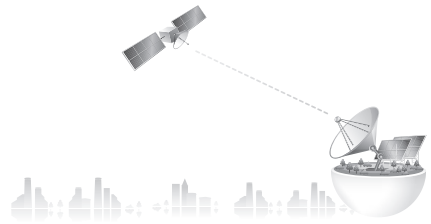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다시 고개드는 조류인플루엔자(HPAI) 신형 바이러스(H5N6) 발생으로 긴장국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청정화 선언을 한지 석달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업계가 다시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H5N6형 A바이러스가 검출된데 이어 15일에는 전북 익산시 만경강에서 같은 형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전남 해남군의 산란계농장, 충북 음성 오리농장, 경기도 양주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시가 발생하는 등 전국으로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에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의 대륙 간 전파는 야생 조류의 이동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겨울철 철새의 왕성한 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국이 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2년간 국내에 피해를 가져온 H5N8형이 아닌 새로운 H5N6라는데 있다. 이번에 국내에서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는 H5N8형보다 병원성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오리보다 닭에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36시간 동안 서울·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 스텐스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더욱이 해외발생 정보를 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시의 확산과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가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다.

특히 금년 처음 발생한 H5N6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농가유입 위험성이 높은 만큼 농가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최근 시의 발생빈도를 보면 2003년 시가 처음 발생된 이후 2년을 주기로 시가 발생된 것과는 달리 발생주기가 짧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금년에만 해도 시청정 선언을 2차례(2, 8월)나 했을 정도이다.

남해에서 경기도까지 전국에 걸쳐 같은 형의 A바이러스가 농장에 발생한 것은 전국에 시바이

러스가 퍼져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농장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한 차단 방역이 이번 시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 필요 부화장 인원 부족현상 심화

양계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외국인력을 배정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금년에는 5만8천명(신규 4만6천명, 재입국 1만2천명)을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농축산분야의 고용허가제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은 양계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부화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의 규정에 따르면 축산업(양계)의 영농규모는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으로 최소 2,000㎡이상의 규모가 되어야만 외국인 근로자 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화장은 168개소로 이중 2,000㎡미만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부화장은 126개소로 전체 농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화장과 증계장은 대부분 분리되어 운영중에 있어 현행대로 양계에 포함된 부화장은 영농규모 미달로 외국인 인력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화장의 시설도 여러층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버섯이나 산란계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고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부화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고용허가 최소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실태 파악 및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업 인력은 매년 1월과 4월에 6:4비율로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농축산 분야에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화장의 배정규정을 명확히 하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계**